



정책 동향

KORE
ELECTRICAL
MANUFACTURER
ASSOCIATION

電力 적정예비율 의무화

배전사업자, 계약등 통해 여유전력 확보해야

산자부, 잉여설비의무화 제도 추진

산업자원부가 미국·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17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민영화 된 이후 이번 미국·캐나다 정전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량설비의 적정예비율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잉여설비 의무화 제도는 불의의 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해 예상되는 전력 판매량보다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더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여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평상시 약 20~30%의 공급예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약 12%대의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배전사업자는 일정량의 적정예비율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배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의 계약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여러 전력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이는 전기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상품임을 감안한 조치”라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민영화 시점이 가시화되는 대로 본격적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CCC 강제인증 시행, 수출중소기업 별문제 없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국의 강제인증(CCC)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애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CC인증을 받아야 중국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품목은 19개분야 132개 품목이며, 지난 6월말 현재 이 132개 품목을 104개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 수출을 해 온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국에서 CCEE(중국 자국산)와 CCIB(수입산)으로 인증체제를 분리운영할 때 이미 CCIB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금년 8월 1일부로 CCEE와 CCIB를 CCC로 통합운영하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CCIB를 CCC인증으로 인정, 별도로 CCC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규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CC인증 획득이 필수적인데, 신규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CCC인증 획득 지원을 요청한 중소기업은 91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9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인증 획득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여 6월말 현재까지 2개 업체가 CCC 인증을 획득했고, 나머지 89개 업체에 대하여도 품질향상 지도 등 각종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말까지 19개 업체, 연말까지는 32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내년 3월말까지는 현재까지 신규로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인증획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의 핵심적인 문제는 당해 기업 제품의 품질수준에 따라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CCC인증획득 지원을 한다고 해도 중국시장 진출 희망기업 각각의 품질관리 능력이 조기 인증획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42-481-4457〉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완전 개방, 중소기업에 큰 도움!!

역대의 고가장비 내맘껏 이용해서 신제품개발 솔솔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장비 전면 개방”이 지방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과거 일부 범용 장비에 국한하여 개방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청 보유 5천여 모든 장비를 거의 무료수준의 이용료(대당 1일 1000원)로 중소기업에 100%개방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 개발에 꼭 필요하지만 워낙 고가여서 중소기업이 단독 구입하기 어려운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개발비용을 절감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장비 전면개방은 중소기업의 개발비용을 연간 30억원 정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추산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구체적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이 실질적인 지방중소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 장비 100% 이용개방(휴일, 야간 포함)제도”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지방청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간 “지역장비공동활용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용개방에 소극적인 대학·연구기관 장비의 개방을 촉진해 나가며 각 지역내 장비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지역산업특성에 맞도록 연 40억원 규모의 장비를 확충해 갈 방침이다.

참고로, '01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실적 및 구입조사결과(과기부)에 의하면, 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의 외부 이용개발율은 대학이 2.0%, 연구기관이 8.5%이고, 외부이용실적 중 산업체 지원비중은 대학이 4.9%, 연구기관이 18.6%를 각각 차지했다.

전력기기 無관세화 본격 논의 ‘관심집중’

내달 WTO서... 관철시 국내업계 파장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등 7개 항목

조명, 개폐기 부품 등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말자는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전기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는 10~14일 열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장소 멕시코 칸쿤)에서 조명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를 추진하고자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가별 관련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무관세화 적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전기·전자와 자동차부품 등 7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는 ▲백열등·형광등·빔 램프·집어등·수은등·나트륨 램프 등 조명등 일체(해당 등기구 포함) ▲개폐기·차단기·계전기·자동제어반 부품 ▲플러그·소켓·콘센트·커넥터를 비롯한 배선기구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은 관세적용이라는 국가별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교역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품목은 선진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이번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국내 전기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에서 부품 또는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해 오던 업체는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거나 소위 ‘토종기업’ 들은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지난달부터 분야별 협상전력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는 관세 등 국가별 무역장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수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전문기획단 발족

중소기업 기술, 투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기술을 근거로 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M&A, 투자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전문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기업자산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다양한 기술평가 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 및 신용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기술에 대한 평가제도 정착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체계적인 연구 및 연구결과의 집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전문기획단을 출범시키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전문기획단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기술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될 계획이며, 전문기획단은 기술가치 평가 전문가, 산업전문가, 벤처 투자전문가, 금융전문가, 특허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중소기업계 대표로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전문적이고 중소기업 실정에 부합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번에 구성되는 전문기획단에서는 주로 ▶선진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및 평가기법 연구 ▶기술평가 모델 개발 및 기술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험분산, 거래상대방 정보 축 등의 시스템 고안·발전 ▶기타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신용평가를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전문기획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M&A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